

Smart Care Service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김성수 서기관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금번 지식경제부가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케어서비스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치료, 투약 등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IT를 이용한 원격적 관리와 필요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 의료서비스를 육성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검토한 배경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향후 고령화 속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지출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성질환 관리비용 증가는 서민경제의 위축, 건강보험 재정압박 및 국가적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볼 때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예방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OECD국가가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의 제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health reform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고 의료비용 구조를 계속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스마트케어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들 사업의 대부분은 특수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정부가 규격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종료 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실패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문제를,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 어느 것이 선차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한 후 기대되는 미래 수익가치 산정을 하는데 불분명한 예측만이 난무할 따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목적 등은 이미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실패, 즉 시범사업의 비즈니스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한 추진 방식을 채택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번 스마트케어 사업은 기업중심으로 사업설계를 하게 하였고, 사업범위에서도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에서부터 건강관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력을 유도한 데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자 신청결과 의료기기-통신-보험-의료정보-건강관리 등에 특화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공유를 통해 시범사업이라는 약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 사업에도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기업 간 협력체계와 경쟁을 서로 인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그간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별도로 환자를 모아야하는 위험을 줄인 점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3월 중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의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6개월간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인력 충원, 추가적 기술보완, 정보관리를 담당할 스마트케어서비스센터 구축, 의료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등 방대한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본 사업에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스마트케어서비스의 경제적 효용성과 임상적 가치를 검증하는 분야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등 두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시범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원격적인 환자관리가 과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증데이터가 세계적으로도 전무하기 때문에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성과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계최대 규모인 10,000명 수준의 환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정보, 보험, 건강관리를 모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이대

로 밀고 나가 성공시킨다면 단번에 세계최고의 헬스케어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고, 필요한 재원이나 법제도적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헬스케어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자가 필요하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 진단과 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IT, BT의 놀라운 발전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시대의 도래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원격적 관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환자가 공급자로부터 받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대 체계가 될 것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 많은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물론 단기간 내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동 시범사업 3년 기간 내 이 같은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것이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스마트케어서비스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감 등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다. **HNA**